



## 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이동훈, 서기관 이경수 (044-200-2056, 2057)
	겨울철 전력수급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과장 강경택, 전문위원 최수혁 (044-200-2216, 2219)
		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	과장 최우석, 사무관 권용균 (044-203-5240, 5254)
	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	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	팀장 권대철, 팀장 정양기 (044-200-2551, 2555)
		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	과장 장영진, 사무관 한정훈 (044-202-3880, 3883)
		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	과장 박정순, 사무관 홍철 (044-201-3862, 3863)
		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	과장 송병준, 서기관 손재형 (044-202-7682, 7512)

## 올 겨울 안정적 전력수급 예상, 충분한 예비력과 예비자원 확보

### <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>

- ▶ 올 겨울 피크시 예비력 1,100만kW 이상 전망, 추가예비자원도 728만kW 확보
- ▶ 전력수급 대책기간 운영(12.10~'19.2.22)을 통한 수급상황 집중관리

### <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>

- ▶ 자살유발·유해환경 차단,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예방
- ▶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도심 제한속도 하향,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6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세종↔서울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」과 「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」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
- \* (참석) 교육부·행안부·문체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고용부·여가부·국토부·중기부장관, 국조실장, 방통위원장, 기재부1·과기정통부2·국방부 차관, 통계청·소방청·경찰청·산림청·기상청장, 공정위 사무처장 등

### ◆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(산업부)

□ 정부는 올 겨울 전력예비력과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□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(전력수급 전망)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,800만kW 내외, 혹한 가정시 9,160만kW 내외로 예상되며,

- \* [기준전망] 최근 10년 평균기온  $-5^{\circ}\text{C}$ , [혹한전망] 최근 50년내 최저기온  $-11^{\circ}\text{C}$  반영
- \* 전력수요 전망시 기온은 동계피크 직전 72시간 동안 5대 도시 평균 기온을 활용
- 공급능력은 1억 322만kW를 확보해, 예상치 못한 한파 발생시에도 예비력은 1,100만kW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구 분	최대전력수요 (A)	최대 공급능력 (B)	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(B-A)
'18.12~'19.2월	8,800만kW (기준전망) 9,160만kW (혹한전망)	10,322만kW	1,522만kW (기준전망시) 1,162만kW (혹한전망시)
17.12~'18.2월	8,824만kW	10,115만kW	1,291만kW

- \* 예측모델 오차 감안시 전력수요가 9,340만kW까지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나, 발생 확률이 0.5%로 매우 낮고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900만kW 이상을 유지 예상

- (전력수급 대책) 정부는 12월 10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를 '전력수급대책기간'으로 지정하고, 수급상황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.

- 노후발전기, 전력구 등 전력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, 발전기 고장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예비자원\* 총 728만kW도 확보하여 필요시 예비력 수준에 맞춰 활용할 예정입니다.

\* 수요감축요청(DR),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, 전압하향 조정 등

- 아울러, 사회적 배려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전기·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.

\* '18~'19년 사업 : 총 612억원 규모, 60만 가구 대상, 가구평균 10.2만원

## ◆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(관계부처 합동)

□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자살, 교통사고, 산업재해의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\*를 논의했습니다.

\* ‘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’, ‘교통안전 종합대책’, ‘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’(’18.1, 국무회의)

□ 분야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(자살예방) 자살 고위험군 발굴·지원을 위해 생명지킴이(게이트키퍼)를 양성(73만명, 9월)하고, 본인부담 완화(20%p, 7월) 등 정신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.

- 지역사회와 함께 생명지킴이 활동을 확대·강화하고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 기관도 지속 확대(52개소 → 63개소)하겠습니다.

\*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설치,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다양화(연령·직종별 등)

\*\* 우울증 검진대상 : (’17) 40·66세 → (’18) 40·50·60·70세 → (’19) 20·30세 추가

- 자살예방법 개정\*과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\*\* 등을 통해 인터넷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유해정보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습니다.

\* ‘동반자살 모집, ‘자살수단 판매정보 유통’ 불법 규정 및 처벌근거 마련(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)

\*\* 복지부·경찰청 합동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등 강화

○ (교통안전)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\*하여 운전자에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,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통해 차량 탑승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.

\*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‘1년 이상 유기징역 →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’ (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본회의 통과, 11.29)

- 도심지내 제한속도 하향(안전속도 5030\*)을 본격화하여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.

\* 도심내 도로 : 제한속도 50km/h 이하 / 주택가 등 이면도로 : 제한속도 30km/h 이하

○ (산재예방) 취약시기 및 사고다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(3,288개소)을 실시하고, 타워크레인 작업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사고를 제로화('17년 17명 → '18.12.1기준 0명)하고 있습니다.

-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\*을 개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\* △법의 보호대상 확대, △도급인의 안전보건책임 장소 확대(22개소→ 모든 장소),  
△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시 형사적 제재 강화 등

□ 정부는 국민생명과 관련된 3대 분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,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.